

아파트 공사판 된 광주...시민들 “못살겠다”

“창문조차 못 열어” 소음·분진 피해 호소 민원 속출 구청 솜방망이 단속에 건설사들은 ‘배짱 공사’ 계속

광주 곳곳에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무더기로 진행되면서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자치단체들은 인력부족과 별다른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을 무시한 건설사들의 ‘배짱 공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30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남구 월산동 주민들은 최근 월산동 ‘반도유보라 아파트’ 신축 공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남구 월산동 363-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7층짜리 11개동 889세대 규모의 반도유보라 아파트를 짓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바로 현장으로 나가지 못해 특정 날을 잡아 단속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의 타 자치구에서도 아파트 신축·재개발에 따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동구 계림7구역에서는 상가변영회 주관으로 계림 두산 3차아파트 공사현장 앞 소음·분진 대책추진위원회가 지난 26일 열리는 등 수시로 항의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계림 오거리와 두산2차 아파트 인근 주택가에 사는 주민들도 지난 1월부터 동구청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구청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양동2구역과 중흥3구역, 우산구역 등의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비산먼지 9건에 과태료 60만원, 소음 23건에 과태료 3560만원을 부과했다. 서구에선 영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현장(영주 포스코)에서 하루 평균 2~3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사랑의 온도 함께 올려요 30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이 50도를 밑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내년 1월31일까지 운영되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목표액은 53억 4900만원이다.

지난달 초 남구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간소음 기준 65dB(데시벨)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5일간의 특정 장비를 포함한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해당 건설 현장은 최근 1년간 비산먼지 2차례, 소음 9차례 등 총 11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다.

남구청은 계도조치를 거쳐 1차 적발시 과태료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후에도 적발되면 특정장비 사용금지 등 공사중지 최대 5일과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주거지역의 경우 소음 기준치는 주간 65dB, 야간·저녁 60dB, 야간 50dB이다. 기준치를 넘으면 구청이 시설규제 개선명령 등 행정 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구청마다 소음 관련 담당 공무원이 1~2명 불과해 소음 측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으며, 비산먼지도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기준이 없어 담당 공무원이 살수 미조치 등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구청의 처벌이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이다 보니, 건설사측이 과태료와 공사중지 명령을 감수하면서 주민 민원을 무시하는 ‘배짱공사’를 감행한다는 점이다.

올해 광주시 남구 분선동 ‘구 남분교회’ 자리에 들어선 남양휴튼 MVG 신축공사장도 공사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해 12번이나 적발됐다. 남양휴튼 MVG는 입주예정일이 2021년 11월인 지상 17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다. 남양건설은 소음 적발로 총 42일간의 공사중지와 2000여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 관련 민원이 발생해도 인력이 없는 탓에 곧바로 현장에 갈 수 없으며, 그나마 출동하더라도 소음 측정을 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한 주민은 “악성 아파트 공사장에 대해선 상시 단속인력을 배치해서라도 주민 피해를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인력 부족만 핑계대는 자치구의 태도를 보면 건설업체와의 유착관계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지검 위정 수사관 등 6명 ‘올해의 수사관’ 선정

대검찰청은 “전국 최초로 현지 조합장을 지구속하는 데 기여하는 등 탁월한 수사력을 보인 위정(41)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검찰주사보 등 6명을 올해의 수사관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 주사보 외에 ‘삼성바이오 분석회계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등의 수사에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판

부패수사4부 소속 임하영(43) 검찰주사보를 비롯한 목진우(48)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 검찰주사보, 김재운(50)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검찰주사, 김용진(47) 부산지검 외사부 검찰주사보, 김희선(43) 수원지검 여성아동조사부 검찰주사보가 올해의 수사관에 함께 뽑혔다.

김희선 주사보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성범죄 사건 수사 등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구형 기준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1년부터 직무수행 실적이 탁월한 수사관을 선정·격려하기 위해 1년 단위로 6급 이하 수사관 6명 이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 망언’ 한국당 의원 3명 불기소 송치 5월단체 “특단의 대책 마련...엄중 처벌해야”

‘5·18 모독 망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5·18 단체와 정치권에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공청회 발표자인 보수논객 지만원씨 등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5·18 유족회, 5·18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5.18민주유공자들을 악의적으로 왜곡과 폄훼한 사실에 상응한 엄중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를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만원씨를 초청해 공청회를 열고 “80년 광주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도 “조금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중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씨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또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3명은 서면으로 조사하고, 지씨는 소환한 경찰은 “고발된 의원들은 작년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불기소의견 송치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씨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인의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또한 지씨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11만명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음주운전자는 제외

광주·전남경찰청이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나선다. 벌점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1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고, 운전면허취득 제한기간 인자는 면허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이 대상자다. 광주에선 총 대상자가 4만2824명으로, 4만1661명의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또 104명의 면허 정지·취소 처분 대상자와 1059명의 면허 취득 제한 대상자가 혜택을 받는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대상자 180명, 면허 취득 제한 대상자 3224명 등이다.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된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도 대상에서 빠졌다.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의무)을 수강해야 한다. 미이수 시 벌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추위 피해 비닐하우스서 불 피우다...불길 번지자 달아난 대학생



○·비닐하우스 안에서 불을 피우다 비닐하우스 2동과 트랙터를 태우고 달아난 대학생이 현주건조물중대의 방화 혐의로 경찰서행.

○·30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A(19)군은 지난 29일 새벽 5시 30분께 광주시 남구 양과동 B(49)씨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불을 붙였는데, 불길이 크

게 번지자 당황해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는 것.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군을 붙잡았는데,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 추위를 피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간 것 같다”며 “현재까지는 방화인지 실화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